

## 금융실명제 지연 부정부패 부채질

성기수(KIST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일보 93.3.28.『讀者의견 여론廣場』

금융실명제란 예금통장 개설 때나 주식 증권 등을 사고 팔 때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쓰자는 것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부정한 돈의 흐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자기 월급 수준에 어울리지도 않는 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담아놓을 가장 편리한 그릇이 가명통장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누구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증여세 상속세로부터도 무풍지대이다. 가명통장의 돈에는 높은 이자세를 물리고 있다고 하지만 불로소득의 이자의 일부를 내는 것을 무서워할 사람은 없다. 가명통장 때문에 가능했던 82년의 장영자 금융부정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는 민심수습용으로 금융실명제안을 국회에 상정한 적이 있다. 그때 여당, 야당이 모두 반대했는데 반대 명분이 연 5천만원의 금융소득을 개인별로 분류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국세청의 컴퓨터실은 물론 한국의 컴퓨터 이용 수준으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의 증언대에 불려나온 S박사가 금융실명제를 즉시 실시해도 기술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증언하며, 격론 끝에 3년간 준비해서 86년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실시한다는 꼬리를 달아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7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조세정의를 이룩하고 공직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여당 후보가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가명계좌는 그리하여 오늘도 건재한데, 얼마전 T증권의 부산지점장이 고객의 돈을 1백20억 원이나 유용할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실명제를 연기할 때마다 부작용을 이유로 삼았는데 가명제의 부작용은 더 크고 하루가 다르게 사회기강을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미국사람들이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그들의 준법정신이라기보다는 연방 조세국의 컴퓨터에 수록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소득관련 자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대만경제가 잘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무원부패방지법, 공직자재산등록법, 금융실명제에 의한 각종 비리의 원천봉쇄도 그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조세제도의 현대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선에서 선진국 총선의 몇 십배되는 선거자금을 뿌리고 있어서 경제까지 인력난으로 멍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거풍토를 뜯어고치는 일도 금융실명제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부정한 돈이 잠시라도 안주할 수 있는 성역을 없애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명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그만큼 앞당기기 때문이다.